

## 공동체 안정을 위해 기업은 가격 전가를 자제할 수 있는가?

황 선 호\*

**【요약문】**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은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성취기준 해설에서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 발생 시 공동체 안정을 위해 기업은 가격 전가를 자제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술의 내적정합성과 외적적합성을 이론적·실증적·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AD-AS 모형을 통해 가격 전가 자제가 초래하는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1965년 1월~2025년 12월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베이지안 VAR 모형으로 공급 충격의 물가 전이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충격-반응 분석 결과, 유가 충격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에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상승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전가가 기업의 도덕적 선택이 아닌 비용 구조와 제약 조건에 따른 조정 과정임을 시사한다. 또한 1970년대 가격 억제 사례와 우리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검토하여 인위적 가격 억제의 부작용과 실현 불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교육의 시민성이 막연한 규범적 당위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적 인과관계와 실증적 근거, 그리고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위에서 정립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가격 전가, 데이터 리터러시,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

\* 국립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sunho3137@scnu.ac.kr).

## I. 서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최상위 기준이며, 교과서 집필과 교수·학습 실천을 조직하는 공식적 규범 체계로서 기능하는 제도적 문서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강제하는 법규적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 및 학교 단위 평가의 절대적 출제 근거이자 교과서 집필 및 검·인정의 필수적 준거로 작용한다. 나아가 전국적인 교육 기회의 균등과 질적 통일성을 보장하며,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서술은 단순한 예시라 할지라도 사실상 강력한 규범적 구속력을 지니며,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학문적 정합성과 논리적 엄밀성이 요구된다. 만약 교육과정 텍스트에 학문적 오류나 검증되지 않은 규범이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를 넘어 학습자의 개념 형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직관을 구조적으로 왜곡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경제교육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제학적 원리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성을 동시에 함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과정의 일부 서술은 경제 원리(실증)와 규범적 당위(시민성)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명제를 사실적 서술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학습자에게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8) 경제생활과 선택’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 기업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개념(misconception)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기업 행위에 대한 오개념으로, 기업의 가격 결정은 제약 조건하의 최적화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의지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둘째, 가격 기구에 대한 오개념으로, 가격은 희소성과 비용을 반영하는 신호(signal)가 아니라 공동체 안정을 위해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셋째, 시민성에 대한 오개념으로, 책임 있는 시민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인과

적 분석을 통해 그 과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육과정의 서술은 이를 단순히 선한 의도의 문제로 오해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은 경제교육의 핵심 목표인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서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비용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가격 전가를 자제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 둘째,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자제가 지속될 수 있는가? 셋째, 기업의 가격 전가 자제라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정에 실증적으로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거시경제학의 표준적 분석 틀인 AD-AS 모형을 통한 이론적 검토와 1965년 1월~2025년 12월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베이지안 VAR 모형(Bayesian vector autoregressive model)으로 실증분석한다. 나아가, 이론과 모형의 예측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가격 억제 정책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거시경제학의 표준적 분석 틀인 AD-AS 모형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외생적 공급 충격은 단기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물가 상승과 생산 위축을 동시에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때 기업이 공동체 안정을 위해 가격 전가를 인위적으로 자제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균형이 왜곡되어 품귀 현상이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소비자는 에너지를 절약할 경제적 유인을 상실하게 되며, 기업은 생산을 지속할 동기가 약화되어 공급 부족이 심화될 위험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격 결정 행태를 고찰한다. 2022 교육과정의 규범적 서술이 현실 경제의 인과관계와 정합성을 갖는지 검토하기 위해 베이지안 VAR 모형을 통해 국제유가 충격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동태적 반응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가격 전가 자제라는 교육과정의 서술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현실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에 더해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통해 재확인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가격 억제 정책이 초래한 품귀 현상과 이중가격 형성 등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 안정을 위한 선한 의도가

시장 기구를 제약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격 전가 자체의 요구가 오히려 기업 도산과 고용 위기를 유발하여 공동체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선한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역사적·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시민성 교육이 추상적 당위를 넘어 행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책임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실증적·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2 교육과정 총론이 강조하는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관점에서 기존 서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실증적 근거와 상충하는 규범적 권고는 학생들이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교육에서의 시민성이 추상적 당위가 아닌 행위의 파급효과와 실현 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분석적 이해 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은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관련 쟁점과 AD-AS 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 충격의 가격 전가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III장은 베이지안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impulse-response analysis)을 통해 비용 충격의 물가 전이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IV장은 역사적 사례와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가격 전가 자체의 파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V장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과정 서술의 해석상 쟁점을 정리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쟁점: 공동체 안정을 위한 가격 전가 자체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제학적 원리의 이해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성을 동시에 함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문제제기는 공동체적 책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적 현상에 대한 분석과 규범적 판단이 어떠한 구조와 순서로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정합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8) 경제생활과 선택’의 성취기준 [9사(일사)09-03]과 그 해설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경제적 유인 구조를 도덕적 당위로 치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취기준 [9사(일사)09-03]은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조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요구한다.<sup>1)</sup>

그런데 이에 대한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는 국제 원유 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up>2)</sup>

“예컨대 국제 원유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가계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이 서술이 함의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선택 메커니즘을 도덕적 자제(moral restraint)로 치환하였다. 기업은 제약 조건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체이며, 가격 결정은 비용 구조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최적화 과정의 결과이다. 가격은 비용 구조, 시장 경쟁도, 수요 탄력성 등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해설은 가격 전가 여부를 경제적 유인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도덕적 자제의 문제로 서술한다. 이는 기업 행위를 구조적 분석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 의지의 산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서술은 모학문인 경제학의 핵심 원리와 배치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가격 형성 과정을 비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유인 구조를 윤리적 선택의 문제로 환원할 경우, 경제 주체의 행동을 제약 조건이 아닌 도덕성의 수준으로 설명하게 되어 향후 정책 효과나 시장 조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

1) [9사(일사)09-03]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조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한다.  
 2)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9사(일사)09-03]에서는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한다. 이를 토대로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민한다.

문제이다. 나아가 분석 단계와 가치 판단 단계를 구분하는 사고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경제 현상을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선행적으로 인식하며, 이는 경제 개념 형성의 위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둘째, 가격의 신호 전달 기능을 간과하였다. 가격은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며,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격 상승은 가계의 소비 절약과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 체계로 작동한다. 공급 충격 상황에서 가격 상승은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정보 전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초과수요나 비가격적 배분 등 추가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 자체가 공동체 안정에 기여한다는 서술은 가격의 조정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규범적 결론을 선행적으로 제시하는 구성으로 보인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단기적 부담 완화 사이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특정 계층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배 문제는 가격 신호 자체를 도덕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가격 조정 기능에 대한 설명 없이 자제를 권고하는 방식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는 학생들이 시장 조정 기능과 분배 정책의 역할을 구분하는 분석 틀을 형성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가지 더 구분되어야 할 점은 가격규제, 소득정책, 보조금, 행정지도 등 정책적 개입은 특정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적 집행이 전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 조정의 부담을 직접 통제하거나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과정 해설의 해당 문구는 이러한 정책적 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기업이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공동체 안정을 위해 가격 전가를 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정책적 개입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정책이 전제된 예외적 상황과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일반적 반응이 구분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셋째, 경제교육 목표와 서술 내용 간의 구조적 모순이 관찰된다. 성취기준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가격 변동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현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설에서는 가격 변동을 공동체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제하고, 그 억제를 암묵적으로 권고한다. 즉, 가격 변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규범적으로 부정적 대상으로 설정하는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현상을 설명·분석하는 교육 목표와 규범적 판단이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가격 변동을 이해의 대상인지 통제의 대상인지 혼동하게 만들며, 분석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사고 훈련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경제 현상을 가치 판단 이전에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서술 방식의 정합성 문제로 귀결된다.

넷째, 과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성은 단순한 선의나 자제의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시민성은 자신의 선택이 시장을 통해 어떤 과급효과를 초래하는지를 인식하고, 그 결과까지 고려하여 행동하는 책임성을 포함한다. 가격 전가를 자제하는 것이 항상 공동체 안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격 신호의 왜곡은 장기적으로 더 큰 자원배분 왜곡과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올바른 시민성은 시장 메커니즘을 오해한 상태에서의 도덕적 자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결과와 그 과급효과까지 숙고한 후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성은 바로 이러한 분석적 이해 위에서 형성되는 책임성이다. 그러나 해당 해설은 가격 전가 자제의 장기적 효과나 자원 배분 왜곡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특정 행위를 규범적으로 권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시민성의 분석적 토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섯째, 경제 충격과 생산 효율성 개선 간의 시차적 모순도 존재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단기적이고 외생적인 공급 충격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은 중장기적 요인의 결과이다(Syversen, 2011).<sup>3)</sup> 즉각적인 비용 충격에 직면한 기업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효율성 개선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 반면 가격 조정은 이러한 충격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시장 반응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간 구조의 혼동은 단기 충격과 구조적 개혁을 구분하는 경제변수의 동태적 이해를 약화시키며, 거시경제적 사건에 대한 단계적 대응 사고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제 변수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사고하는 거시경제학적 분석 틀의 학습을 근

3) Syversen(2011)은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영진의 관리 관행, 노동 및 자본의 질적 수준(IT 투자 포함), R&D 및 제품 혁신,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혁신 요인들은 본질적으로 대규모 자본 투자, 오랜 기간의 경험 축적, 혹은 조직 구조의 개편을 수반하는 중장기적 과정이다. 따라서 외부의 급격한 비용 충격에 대응하여 기업이 단기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여 비용 상승분을 내부 흡수할 수 있다는 교육과정의 서술은 실증연구의 결과와 상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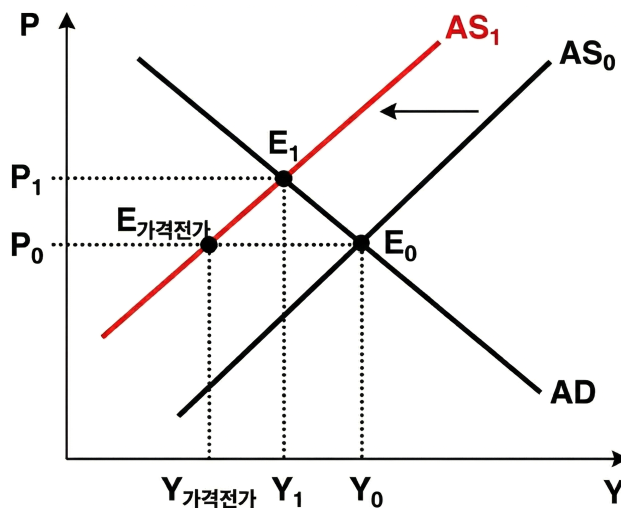
본적으로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서술의 정합성 문제를 드러낸다.

요컨대,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의 해당 서술은 경제학의 핵심 원리인 경제적 유인 구조와 가격의 신호 기능을 도덕적 당위로 치환함으로써 경제 현상에 대한 비구조적 이해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기적 충격과 중장기적 대응 사이의 시차적 모순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분석과 가치 판단의 선후 관계를 왜곡하여 학생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파급효과를 책임 있게 고찰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서술 방식은 경제교육의 본질인 객관적 인과관계 분석 능력을 약화시키고 규범적 판단을 선형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결함이 있다.

## 2. AD-AS 모형과 가격 전가 자체의 효과

본 절에서는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을 이용해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조정되어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부정적 공급 충격(negative supply shock)이 발생했을 때, 시장 기구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가격 조정이 제약되는 상황을 이론적으로 비교·분석한다.

<그림 1> AD-AS 모형: 국제유가 충격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기업의 단위당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그림 1>에서 공급 충격 이전의 초기 균형점  $E_0(Y_0, P_0)$ 를 지나던 단기 총공급곡선  $AS_0$ 을  $AS_1$ 로 좌측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준적인 AD-AS 모형에 따르면, 경제는 새로운 단기 균형점  $E_1(Y_1, P_1)$ 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물가 수준의 상승( $P_0 \rightarrow P_1$ )과 실질 GDP의 감소( $Y_0 \rightarrow Y_1$ )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압력을 받게 되며, 시장 가격은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다. 이때 상승한 가격은 희소해진 자원(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경제 주체들에게 전달하는 신호(signal)로 작동하여 가계의 소비 위축과 기업의 생산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수급 균형을 회복시킨다.

2022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의 소비자 전가를 자제하는 상황은 이론적으로 시장 가격이 새로운 균형 수준  $P_1$ 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기존 수준  $P_0$ 에서 인위적으로 억제되는 가격 통제(price control) 상황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이는 법적·제도적 가격 통제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적으로는 가격 기구의 작동이 제약되어 경제가 균형점  $E_1$ 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균형 상태인  $E_{\text{가격전가}}(Y_{\text{가격전가}}, P_0)$ 에 머무르는 상황과 유비적(analytical analogy) 관계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AD-AS 모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만성적인 초과수요(excess demand)와 배분 비효율성을 예측할 수 있다. 가격 전가가 억제되어 물가가 원래의 수준  $P_0$ 에 머물러 있을 경우,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므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유인을 갖지 않는다(수요량  $Y_0$  유지). 반면, 기업은 비용 상승( $AS_0 \rightarrow AS_1$ )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어 생산량을  $Y_{\text{가격전가}}$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공급량 감소). 그 결과 시장에서는 수요량( $Y_0$ )이 공급량( $Y_{\text{가격전가}}$ )을 초과하는 품귀 현상(shortage,  $Y_0 - Y_{\text{가격전가}}$ )이 발생하며, 이는 암시장이 형성되거나 배급제와 같은 비시장적 배분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다.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여 총공급곡선이 좌측 이동( $AS_0 \rightarrow AS_1$ )한 상태에서 가격이 새로운 균형 가격  $P_1$ 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P_0$ 에 고정되면, 기업의 마진은 급

격히 축소된다. 이는 생산량이 자연스러운 조정 수준인  $Y_1$ 보다 훨씬 낮은  $Y_{\text{가격전가}}$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기업의 연쇄 도산과 생산 능력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공동체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 $Y_1 \rightarrow Y_{\text{가격전가}}$ )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가격의 신호 전달 기능(signaling function)의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 가격이 공급 충격을 반영하여  $P_1$ 로 상승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을 알리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신호 기제다. 그러나 가격 전가 자체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P_0$ 에 고정함으로써 이러한 신호를 차단한다. 이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절약하여 수요량을 줄이고, 기업이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가격 전가 자체, 즉 물가  $P_0$ 의 유지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왜곡( $E_1$ 으로의 조정 실패)을 누적시켜 경제 전체의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의 조정을 저해한다.

결론적으로 AD-AS 모형을 통해 볼 때, 공급 충격 상황에서의 인위적인 가격 전가 자체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이론적 모순이 있다.

### III. 실증분석

#### 1. 공급 충격의 가격 전가에 관한 선행연구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이 국내 물가로 전이되는 현상은 기업의 개별적 선택을 넘어선 거시경제학적 인과관계로 설명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가격 전가 현상이 경제 구조와 외부 충격에 반응하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가격 설정 행태임을 입증한다.

첫째, 거시경제학적 일반론의 관점에서 유가 충격은 비용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이 정립되어 있다. Blanchard and Gali(2007)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00년대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유가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거시경제 변수, 특히 물가와 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충격

임을 밝혔다. Kilian(2008) 또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유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임을 이론적으로 재확인하였다. 이는 유가 상승 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경제적 반응임을 시사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들은 이러한 비용 충격이 기업의 가격 설정 행태를 통해 실제로 소비자물가로 전가됨을 보여준다. De Gregorio et al.(2007)은 유가 상승분이 인플레이션으로 전가되는 정도(pass-through rate)를 분석한 결과, 전가율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도 여전히 유의미한 전가 경로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Hooker(2002)는 국제유가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이거나 비선형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의 가격 결정은 충격의 성격과 거시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격 전가의 정도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여부나 노동 시장 유연성 등 경제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기업의 가격 전가 자제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영역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적 맥락에서도 이러한 전가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된다. Jongwanich and Park (2011)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국제유가 및 식량 가격 상승 충격이 국내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효과가 매우 뚜렷함을 실증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한 백예인 외(2022)는 글로벌 공급 충격이 국내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효과가 3개월 이내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그 전가율이 더욱 증폭됨을 밝혔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내부적으로 흡수하여 가격 전가를 자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선행 연구들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로 전가되는 과정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주로 거시경제적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함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물론 전가율의 수준과 속도는 경제 구조, 통화정책 환경, 시장 경쟁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비용 충격과 가격 조정 간의 인과적 연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가격 전가 자제라는 규범적 서술은 이러한 실증적, 이론적 배경과 배치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와 시차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VAR 모형을 주요 분석 도구로 활용한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학문적 흐름에 따라 베이지안 VAR 모형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 2. 자료 및 실증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VAR을 이용한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국제유가 충격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는 동태적 경로를 규명한다. VAR 모형은 변수 간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 내 모든 변수를 내생변수로 취급하여 추정하는 다변량 시계열 모형으로, 변수 간의 피드백 관계와 시차 효과를 데이터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충격-반응 분석은 모형 내 특정 변수에 가해진 1단위의 외생적 충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타 내생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 경로와 지속성을 추적하는 기법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 방향과 충격의 시차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실증분석 방법론이다.

분석 변수로는 두바이(Dubai) 원유 가격과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고, 분석 기간은 1965년 1월~2025년 12월의 월별 자료(732개)이다. 이 기간은 1·2차 오일쇼크를 포함하여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를 식별하기에 적합하다.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하였으며, 충격-반응 함수는 특정 변수에 1 표준편차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반응 변수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베이지안 VAR 모형은 거시경제학의 표준적 방법론인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를 가정한 것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서 특정 기업의 특수 사례가 아닌 시장 전체의 공급자를 상징하는 기업을 상징하여 가격 전가 자체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 시계열 데이터에서 도출된 대표적 기업의 전가 행태(pass-through behavior)는 교육과정의 규범적 권고가 현실의 시장 메커니즘 내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정규-역위샤트(Normal-Inverse Wishart) 사전분포 적용을 위해 Banbura et al. (2010)의 더미 관측치 사전분포(dummy observations prior)를 사용하고, 단위근과 공적분 관계를 고려해 계수합 사전분포(sum-of-coefficients prior)를 함께 적용하였다. VAR 시차와 초모수(hyperparameters)는 Giannone, Lenza and Primiceri(2015)를 따라 주변 가능성도(marginal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값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시차는 13개월, 모형의 전반적 응집도(overall tightness)를 제어하는 초모수 값은 0.6543이다.

위 설정에 따라 본 연구는 물가 변동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해하거나 특정 시기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기보다는 국제유가와 같은 외생적 비용 충격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로 어떠한 방향과 경로를 통해 전이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나

추가 거시변수 확장을 통한 기여도 분해보다는 기본적인 변수 구성을 바탕으로 충격-반응 분석을 중심에 두었다. 물론 임금, GDP, 경제성장률 등 관련 변수를 포함할 경우 보다 확장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비용 충격의 전이 방향과 구조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분석 범위를 제한하였다.

### 3. 충격 식별

충격-반응 함수에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제약 조건, 즉 구조적 충격의 식별(structural identification)이 필요하다. 충격 식별을 위해 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하였으며, 변수의 나열 순서는 국제유가 → 생산자물가 → 소비자물가 순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식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국내 물가 충격이 국제유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국제유가를 가장 외생적인 변수로 배치하였다. 둘째, 비용 전가 경로는 원자재 수입 → 생산 및 도매 → 최종 소비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산 단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메뉴비용(menu cost) 등의 존재로 인해 도매물가나 원자재 가격에 비해 정보 반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변수 순서는 당월(contemporaneous)의 즉각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며, 1개월 이후의 시차를 통한 변수 간의 피드백과 동태적인 상호작용은 VAR 모형의 계수 추정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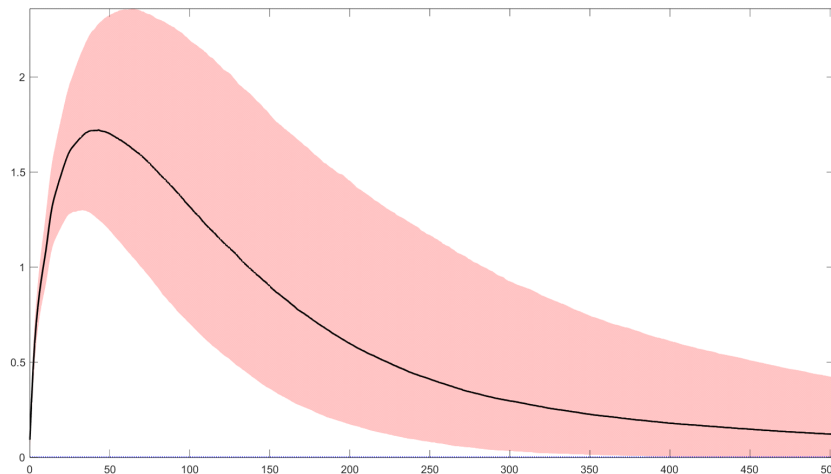
### 4.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 1)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생산자물가의 반응

<그림 2>는 국제유가에 대한 1 표준편차 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때, 생산자물가의 반응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충격-반응 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후분포의 68% 신용구간(credible interval)이 0을 포함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신용구간이 0을 포함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충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 결과, 국제유가 충격에 대해 생산자물가는 즉각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한다. 생산자물가의 반응은 충격 발생 후 약 43개월 지점에서 1.72%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며, 이후 453개월 동안 유의미한 양(+)의 값을 유지하는 극단적인 지속성을 보인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원유 가격 상승이 회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비용 압박(cost-push)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격이 기업 내부에서 흡수되지 않고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실증한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이 생산 비용 증가를 통해 필연적으로 물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Kilian(2008)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2>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생산자물가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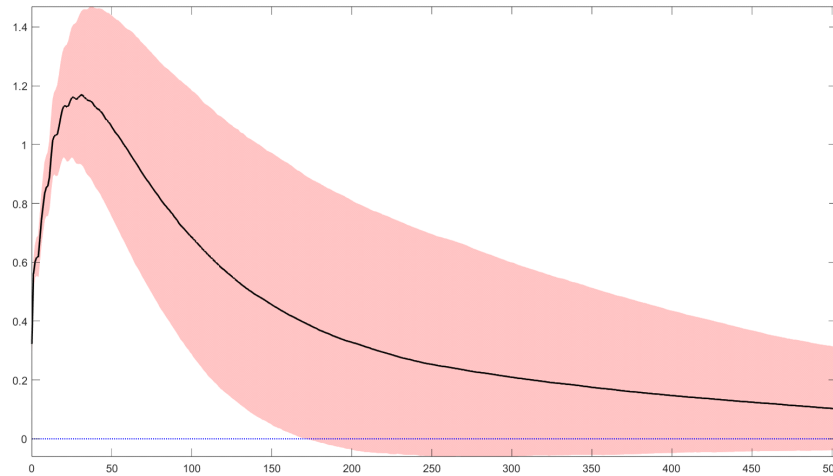


주: 실선은 사후분포의 중앙값(median)을 의미하며, 음영 구역은 사후분포의 68% 신용구간을 나타냄. 가로축은 충격 발생 후 경과 월수(month), 세로축은 반응 변수의 로그 변화율(%)을 의미함.

## 2) 생산자물가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

<그림 3>은 생산자물가 상승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물가의 반응을 나타낸다. 생산자물가 상승 충격에 대해 소비자물가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하여 약 31개월 시점에서 1.17%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다. 이러한 충격이 발생한 이후 반응은 소멸되지 않고 약 172개월 동안 유의미하게 지속된다. 이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고 강력함을 의미한다.

<그림 3> 생산자물가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



주: 실선은 사후분포의 중앙값(median)을 의미하며, 음영 구역은 사후분포의 68% 신용구간을 나타냄. 가로축은 충격 발생 후 경과 월수(month), 세로축은 반응 변수의 로그 변화율(%)을 의미함.

### 3)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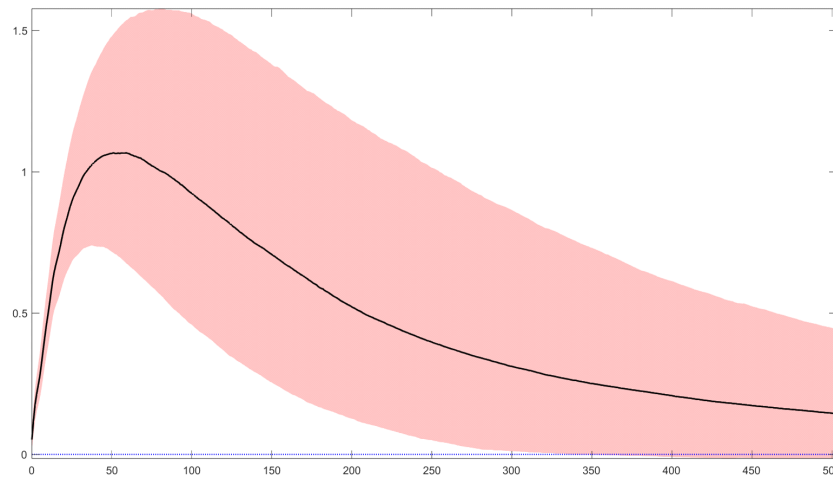
<그림 4>는 국제유가 충격은 소비자물가에 대해 유의미한 상승 압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가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영향은 생산자물가보다 다소 늦은 약 51개월 시점에 1.07%로 정점에 달한다. 이후 약 340개월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세가 지속된다. 이는 기업이 설령 일시적으로 가격 전가를 자제하려 노력하더라도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거시경제적 고리는 끊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충격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시차를 두고 정점에 달한다는 점은 Hooker(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의 가격 조정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뒷받침한다.

실증분석 결과, 원자재 가격 충격은 생산자물가를 경유하는 경로든 혹은 직접적인 경로든 최종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변수를 추가하거나 VECM 등 모형 설정을 바꾸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2022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에서 언급된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의 소비자 전가를 자제할 수 있다”는 진술은 분석 결과와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데이터는 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소비

자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의 서술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실제 가격 결정 메커니즘과 비용 충격의 실증적 전가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4> 국제유가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



주: 실선은 사후분포의 중앙값(median)을 의미하며, 음영 구역은 사후분포의 68% 신용구간을 나타냄. 가로축은 충격 발생 후 경과 월수(month), 세로축은 반응 변수의 로그 변화율(%)을 의미함.

#### IV. 역사적 사례와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

앞서 이론과 실증분석으로 예측한 가격 전가 자체의 부작용, 즉 수급 불균형과 배분 왜곡은 단순한 모형 속의 가설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historical evidence)과 현재 기업이 직면한 구조적 현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 1. 역사적 반례: 1970년대 가격 억제 정책의 의도와 결과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협정요금, 행정지도 등 강력한 가격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동체 안정을 위한 이러한 규범적 개입은 시장의 가격 기구

를 제약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첫째, 1974년의 생필품 파동은 인위적인 가격 억제가 초래한 정책 진단 오류의 대표적 사례다. 1차 오일쇼크 직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설탕, 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정부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였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심각한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경제적 불균형이 아닌 도덕적 일탈(매점매석)로 규정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을 동원해 창고를 수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품귀 현상은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가격이 시장 균형 수준보다 낮게 억제된 상황에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경제 주체의 합리적 반응임에도 이를 비경제적 요인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책 대응이 실패한 사례로 평가된다.

둘째, 1978년의 시멘트 파동은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시장 내 이중가격 구조(dual price structure)를 형성시켰음을 보여준다. 건설 경기 호황으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을 통제하자 공식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공식 가격과 웃돈이 얹어진 암시장 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 구조가 형성되었고, 건설 현장이 중단되는 등 실물 경제의 왜곡이 심화되었다. 이는 가격 기능이 제약될 경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전개됨을 입증한다.

셋째, 1970년대 초반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은 단기적 물가 안정의 이면에 비용의 사회적 전이 문제를 야기하였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교통 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제한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승한 비용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나 재정 지원의 형태로 이전되었다. 이는 가격 통제가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비용을 사회 전체로 전가했음을 드러낸다.

물론 1970년대의 가격 통제는 법적·행정적 강제력을 수반한 정책이었으며, 현행 교육과정의 서술은 규범적 권고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는 신호 기제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약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가격 기구가 제약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품귀 현상, 암시장 형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특정 시기의 특수성을 넘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온 경제적 현상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교육과정 문구와 제도적으로 동일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격 기구가 제약될 때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이다.

## 2.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현실: 한계기업과 고용 위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제하는 “기업이 가격 전가를 자제할 수 있다”는 명제는 기업의 재무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부 흡수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제가 광범위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내 높은 한계기업 비중은 가격 전가 자제가 기업의 도산 위험을 직접적으로 가중함을 시사한다.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이다.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급등한 상태에서 가격 전가를 자제하면 이윤은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으로 정의되며, 이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만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2024년 기준 전체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25). 이는 상당수 기업에게 가격 전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강제임을 시사한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전가 자제는 공동체 안정을 저해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전체 종사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재무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들에게 가격 전가 자제를 광범위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고용 축소 압력에 직면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와 소득 위축을 통해 공동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가격 억제를 통한 단기적 안정 추구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생태계의 취약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도와 결과 사이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

## 3. 소결: 의도와 결과의 괴리

Milton Friedman은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그 결과가 아닌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다(One of the great mistakes is to judge policies and programs by their intentions rather than their results)”라고 지적한 바 있다(Friedman, 1962; Friedman and Friedman, 1980). 이는 정책 평가의 준거가 추상적인 지향점이 아닌 실증적인 결과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가

가격 전가 자제라는 규범이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구조적 제약 속에서는 공급 위축, 배분 왜곡, 기업 도산 위험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민성은 추상적 당위의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행위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책임성’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가격 전가 자제를 일방적 규범으로 제시하기보다 가격 조정의 단기적 부담과 장기적 조정 기능을 동시에 분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의도와 결과를 구분하여 사고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V. 교육과정의 정합성 검토 및 논의

본 장에서는 III장의 실증분석 결과와 IV장의 역사적·구조적 현실을 바탕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나타난 가격 전가 자제 서술의 정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데이터 리터러시 관점에서의 비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즉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교육과정의 해당 서술은 이러한 교육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첫째, 교육과정의 서술이 실증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와 상충한다. III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제유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임을 입증한다. 이는 기업의 가격 결정이 도덕적 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 이윤 극대화라는 제약 조건하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가격 전가를 자제할 수 있다”는 명제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데이터(현실)와 규범(당위)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가치 판단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구성으로 판단된다.

둘째, 증거 기반 사고(evidence-based thinking)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 판단이 실증적 자료와 충돌할 경우,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성

취기준 해설은 비용 충격이 기업의 재무 구조와 시장 기구에 미치는 실증적 분석 과정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 안정이라는 규범적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 현상의 인과 구조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규범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귀결된다.

## 2.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성의 재정립

사회과 교육에서 시민성은 핵심적인 가치로 다루어져 왔다. 다만 경제교육에서의 시민성은 단순히 규범적 당위를 수용하는 태도에 머무르기보다 사회·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결과를 신중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역량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성은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이 단기적 의도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고용, 분배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포함해야 한다. 시민적 판단은 바람직함(desirability)에 대한 지향과 더불어 현실의 제약 조건(feasibility)에 대한 인식 위에서 성립할 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교육에서의 시민성은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라는 실증적 토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적 시민성은 희소성, 경제적 유인, 가격의 신호 기능과 같은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IV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격 전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나 자원 배분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경제적 시민성은 정책이나 집단적 선택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장 기구의 작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둘째, 책임 있는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규범적 이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책적·구조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IV장의 거시경제 자료는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가 재무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전가 자제와 같은 규범적 요구는 의도와 달리 기업의 경영 악화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특정한 도덕적 판단을 선형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정책 선택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도록 안내함으로써 학습자가 결과 책임성을 동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시민성은 감성적 호소나 일방적 규범 제시에 머무르기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형성되어야 한다. 시민성은 바람직함에 대한 지향과 더불어 선택의 과급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시민적 판단이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실제 시장 구조 내에서 작동 가능한지(실현 가능성), 외부의 압력 없이도 시스템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지속 가능성),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일반화 가능성)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인과적 사고를 갖춘 합리적 시민을 양성한다는 경제교육의 목표와도 정합적인 방향이라 판단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 기업은 ...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는 서술이 경제학적 정합성과 실증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론적·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AD-AS 모형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이 시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조정 변수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비용 충격하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 이윤 축소, 공급 위축, 자원 배분 왜곡 등 구조적 부작용을 수반한다. 가격 전가는 기업의 자의적 선택이라기보다 비용 구조 변화에 대한 시장 조정 메커니즘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베이지안 VAR 분석 결과, 국제유가 상승 충격은 생산자물가를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물가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 충격이 생산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가격 체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이되는 동태적 조정 과정임을 의미한다. 특히 단기 제약에 기반한 구조적 식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반응이 큰 지속성을 보였다는 점은 비용 전가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 내재된 구조적 현상임을 입증한다.

셋째, 역사적 사례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여건 역시 가격 전가 자제를 일반적

대응 원리로 상정하는 접근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970년대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적 물가 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축, 품질 저하, 암시장 형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는 비용 충격을 가격 조정을 통해 흡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형태의 왜곡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높은 한계기업 비중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하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광범위한 가격 전가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 조건과 고용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가격 규제나 정책적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충격 상황에서 가격 조정 기능이 갖는 구조적 역할과 그 제약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급 충격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전가 자체를 일반적 대응 원리로 제시하는 서술은 이론적·실증적·역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서술은 기업의 가격 전가 자체를 일반적 대응 원리로 제시하기보다 비용 상승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비판은 경제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시민성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학문적 엄밀성과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선언적 시민성이 경제교육의 핵심 가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제 교육과정에서 시민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실현 가능성(feasibility)으로, 실제 사회 구조와 시장 인센티브 체계 내에서 구현 가능한 대안이어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외부의 압력이나 일회적인 미담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 기구나 제도적·구조적 기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sup>4)</sup> 셋째,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으로, 특정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경제 원리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sup>5)</sup>

- 
- 4)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른 식품 가격 조정 등의 사례는 기업의 자발적 호응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의 자율적 동력보다는 행정적 권고에 따른 일시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비자발적 상생은 외부의 압력이 사라질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 5)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마스크 가격 동결이나 특정 품목에 한정된 가격 자체 요청 등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특수한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이를 보편적인 경제 주체의 행위 원리로 일반화하여 경제교육의 실증적 근거로 삼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 측면에서 논리적 비약의 위험이 있다.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시민성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과 내용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이상 선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교육에서의 시민성은 바람직함(desirability) 이전에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을 먼저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공급 충격 상황에서는 가격 전가 자체의 당위적 요청을 강조하기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한 선별적 지원, 통화정책의 조정, 경쟁 촉진을 통한 구조적 대응 등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정합적인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

특히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강조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관점에서 기존 서술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교육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는 실증적 근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판단을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범적 권고가 충분한 조건 설명 없이 제시될 경우, 학습자는 경제 현상의 구조적 제약을 분석하기보다 가치 판단을 우선하는 사고 경로로 유도될 우려가 크다.

결국 경제교육은 특정 행위 주체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와 정책 수단의 제약을 이해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능한 대안을 숙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상적 당위의 반복이 아닌 행위의 파급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이해 위에서 정립된 시민성만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경제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서술의 내적 정합성과 경제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구현 양상이나 교과서 등에서의 반영 방식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장 적용과 교과서 반영 등에 대한 검토는 교육과정 서술의 파급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한 후속 과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제정 절차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내용과 평가, 교과서 집필을 구속하는 최상위 규범이자 법적 기준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서술은 단순한 예시라 할지라도 학습자의 개념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학문적 정합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적한 가격 전가 자체 서술은 이러한 엄밀한 검증 없이 규범적 당위만을 앞세운 결과, 학습자의 인과 이해를 구조적으로 왜곡할 위험을 안고 있다.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교과 내용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범과 실증 사이의 모순을 치열하게 교차 검증하는 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치열한 논쟁을 통과한 문장만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는 권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백예인·한원태·김현석(2022),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2(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행(2025),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 한국은행.
- Bañbura, M., D. Giannone, and L. Reichlin, (2010), Large Bayesian Vector Auto Regression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5(1), 71-92.
- Blanchard, O. J. and J. Galí (2007),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Oil Shocks: Why are the 2000s so Different from the 1970s?, NBER Working Paper, No. 13668.
- De Gregorio, J., O. Landerretche, and C. Neilson (2007), Another Pass-through Bites the Dust? Oil Prices and Inflation, Working Papers Central Bank of Chile, No. 417.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iedman, M. and Friedman, R. (1980), *Free to Choose: A Personal Statement*, Harcourt.
- Giannone, D., Lenza, M., and Primiceri, G. E. (2015), Prior Selection for Vector Autoregress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7(2), 436-451.
- Hooker, M. A. (2002), Are Oil Shocks Inflationary? Asymmetric and Nonlinear Specification versus Changes in Regim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4(2), 540-561.
- Jongwanich, J. and D. Park (2011). Inflation in Developing Asia: Pass-through from Global Food and Oil Price Shocks,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25(1), 79-92.
- Kilian, L. (2008), The Economic Effects of Energy Price Shock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4), 871-909.
- Sims, C. A. (1980), Macroeconomics and Reality, *Econometrica*, 48(1), 1-48.
- Syverson, C. (2011), What Determines Productiv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2), 326-365.

<Abstract>

## **For Community Stability, Can Firms Refrain from Price Pass-through?**

Sun Ho Hwang\*

The 2022 Social Studies Curriculum states that firms can refrain from price pass-through for community stability during supply shocks.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external appropriateness of this claim from theoretical, empir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Using the AD-AS model, it analyzes potential market distortions arising from restraint in price pass-through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inflation transmission through a Bayesian VAR model with data from 1965 to 2025. Impulse-response analysis shows that oil shocks generate significant and persistent increases in both producer and consumer pr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ice pass-through is a structural adjustment driven by cost constraints rather than a discretionary moral choice. Historical evidence from the 1970s and Korea's structural conditions further illustrates the side effects and practical infeasibility of sustained restraint in price pass-through. Accordingly, the study argues that citizenship in economic education should be grounded in economic causality, data literacy, and empirical evidence, and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feasibility, sustainability, and generalizability rather than vague normative imperatives.

**Key words:** 2022 Social Studies Curriculum, Price pass-through, Data literacy, Feasibility, Sustainability, Generalizability

원고접수: 2026년 02월 21일      심사일: 2026년 03월 12일 ~ 2026년 04월 10일  
게재확정: 2026년 04월 10일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ho3137@scnu.ac.kr).